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EF Education Finance Research Institute

RI 교육재정중점연구소



교육재정 중점연구소 특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망과 향후과제 /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 / 합리성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학과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교수논단

평화교육의 세 기둥: 상상하기, 공감하기, 용기내기 / 송영훈(강원대학교 교수)



재학생 기고문

통일교육과 강원도 / 이서현(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전국의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윤요왕(춘천 마을자치지원센터 센터장) / 윤형순(강원도교육청 장학사)
/ 최근순(비단봉사회적협동조합 최근순 이사장)



What a Wonderful World 세계의 교육이야기

[독일] 평화로운 공존, 다문화 소통을 위한 평화교육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 행사


Education for KNU 특강 개최 / 이정연(동경대학교 교수)



지역교육협력학과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 소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향후 전망*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원의 확대는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으며,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율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으며, 이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위한 사전포석이었음이 밝혀졌다.

2010년 이후 내국세 교부율 변화는 2010년 부가가치세를 분할하는 방식(6%)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2014년(6%→11%), 2019년(11%→15%), 2020년(15%→21%)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는 방법에 따른 변화였다. 2014년의 확충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결손까지 더해져 재원을 조정하는 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제도가 새로 도입되었고, 내국세 교부율이 20%에서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조정되었다. 문제는 지방세 확충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는 항상 재정중립성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은 늘어나도, 즉 지방재정은 늘어나도 지방교육재정은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확대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학교 증설 수요와 교원 증원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수요가 추가되었다. 누가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원 확충에 관심이 없었다.

* 송기창(2017) 논문과 송기창(2021b) 논문의 내용 일부를 정리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임.

오히려 정부는 2001년 이후로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는 임시 방편적인 지방채 발행과 BTL 사업을 통해 더 이상의 자원 확충없이 돌려막기를 계속해 왔다. 결과적으로, 유·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자원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한편,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다양한 지방교육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7월에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지방교육재원 확보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넘겨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7,557억원을 감안해도 2013년이나 2014년보다 줄어들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과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세로 지원되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 2조원 정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했기 때문이다. 2020년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한 탓이다. 교부금이 감소했을 때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보전하고 나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1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종예산)	2022 (예산안)
보통교부금	348,782	378,558	393,675	394,400	380,185	416,399	448,084	509,509	588,010	520,433	579,164	624,896
특별교부금	12,608	13,931	14,448	14,287	13,870	15,217	17,584	15,268	17,295	14,994	16,793	18,112
증액교부금	-	-	-	-	-	-	-	-	-	6,460	9,431	9,094
합계	361,390	392,488	408,123	408,687	394,056	431,616	465,667	524,777	605,305	541,887	605,388	652,10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연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교육부(2021),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6년 이후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과거 교부금 결손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BTL사업 추진 규모를 상쇄하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는 보조적으로 추진된 BTL방식에 의한 학교신증설 규모는 2013년까지 원금기준으로 7조 6,642억원에 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2009년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지방채 발행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2010년 3조 115억원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교부금 확충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고, 2005년부터 도입한 BTL사업의 결과로 2008년과 2009년 상환된 BTL 지급금이 각각 1,894억원, 3,740억원에 불과했으며, BTL 지급금을 채무부담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적어도 BTL사업 초기에는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다(송기창, 2015).

2010년 이후 상환해야 할 BTL 지급금 규모가 10조 3,215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지방채 잔액을 합산하자 2010년 시·도교육청 채무가 1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시·도교육청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시·도별로 무상급식 경쟁이 시작되어 재정위기는 더욱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어린이집까지 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지경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지방채 발행 및 BTL 사업 규모와 지방채 및 BTL 상환규모를 종합해 볼 때, 지난 20년 동안 시·도교육청은 연평균 1조 5,742억원의 빚을 내서 1조 7,508억원을 빚 갚는 데 지출함으로써 계속 돌려막기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으로 충당했다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BTL 지급금 35조 150억원을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년말 현재 시·도교육청이 상환해야 할 지방교육채 원리금 규모는 1조 5,722억원이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21), 여기에 BTL 지급금 규모 5조 2,338억원을 합하면, 시·도교육청 채무는 6조 8,060억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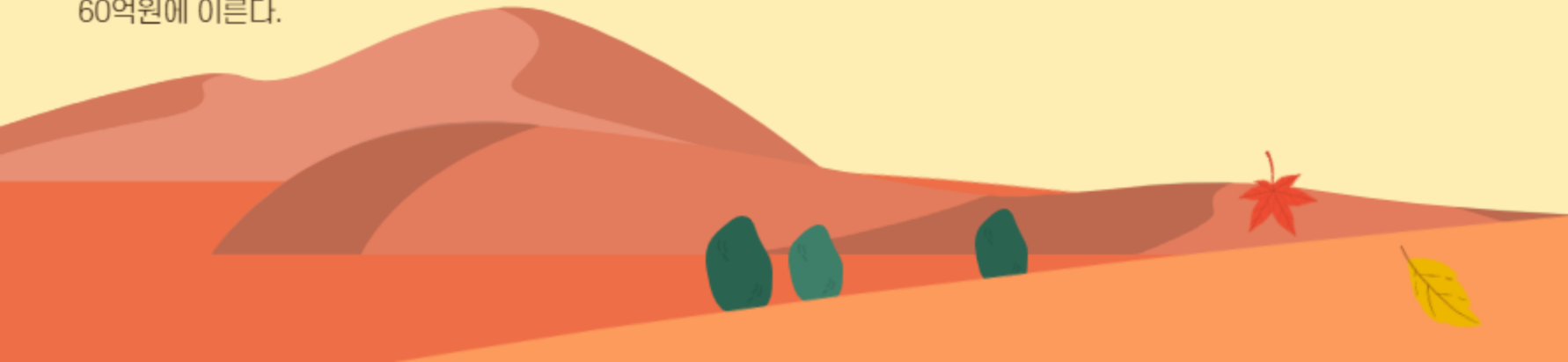


표 2 지방교육채 발행과 BTL사업 추진 및 상환내역

(단위: 억원)

연도	지방교육채			BTL사업			관리채무상환액 및 잔액	
	발행액	상환액 (원금·이자)(A)	잔액 (원금)(B)	BTL투자액	상환액 (C)	잔액(D)	상환액 (A+C)	잔액 (B+D)
2001	1,652	5,402	32,466				5,402	32,466
2002	633	9,357	25,444				9,357	25,444
2003	728	7,530	19,610				7,530	19,610
2004	5,853	7,325	18,681				7,325	18,681
2005	18,154	10,798	26,344	12,360		12,360	10,798	38,704
2006	3,488	10,384	19,715	24,233		36,593	10,384	56,308
2007	5,329	16,546	10,853	15,661		52,254	16,546	63,107
2008	2,657	9,345	3,856	8,410	1,894	60,664	11,239	64,520
2009	21,384	2,219	20,266	7,870	3,740	66,553	5,959	86,819
2010	10,402	1,985	30,115	3,576	6,226	103,215	8,211	133,330
2011	0	9,364	21,339	3,809	7,206	115,998	16,570	137,337
2012	339	1,204	20,769	339	7,837	112,598	9,041	133,367
2013	9,583	1,314	29,429	384	8,189	105,443	9,503	134,872
2014	38,022	21,347	46,620		8,174	94,644	29,521	141,264
2015	61,268	2,663	106,896		8,114	87,248	10,777	194,144
2016	30,102	6,559	134,364		7,995	78,603	14,554	212,967
2017	11,431	26,476	121,071		7,933	72,419	34,409	193,490
2018	3,209	43,378	82,027		7,935	65,105	51,313	147,132
2019	0	62,993	19,231		7,758	58,643	70,751	77,874
2020	0	3,362	15,722		7,598	52,338	10,960	68,060
합계	224,234	259,551		76,642	90,599		350,150	

자료 : 송기창·윤홍주(2011); 한국교육개발원(각연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향후 전망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자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낮추거나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대비 2020년 학생수는 21% 줄어든 반면, 학교수는 3.5%, 교원수는 6.1%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세입은 62.8% 증가하였다. 2021년 당초 예산에서는 교부금이 53조 2,300억원으로 2020년 교부금 예산 53조 5,112억원보다 2,812억원이 감소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 59조 5,958억원으로 증액되고, 다시 2022년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11조 708억원이 늘어난 64조 3,008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내국세 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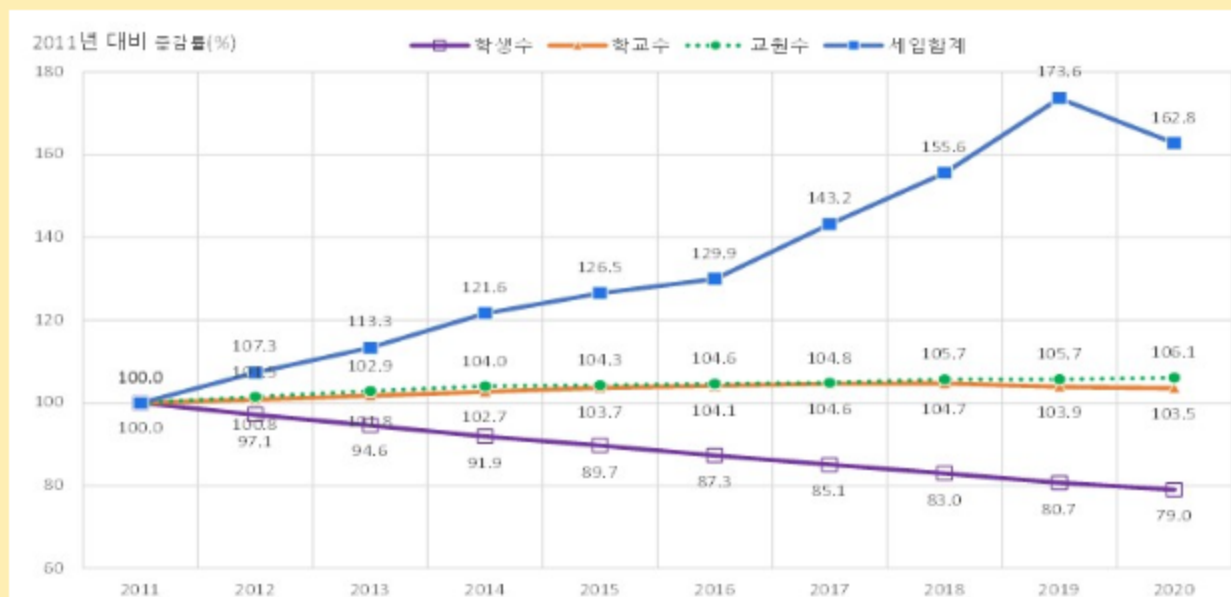


그림 1

2011년 대비 지방교육재정 세입,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의 변화

그러나 이들의 지적은 학생수가 감소했음에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 즉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데 투자하여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를 늘려야 했고, 결과적으로 학교신·증설비와 학교운영비, 교원인건비가 계속 증가했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 감소 문제와는 별개로 초·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섰으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에 많이 미달될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적은 기형적 교육비 구조가 나타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여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과 교육세 교부금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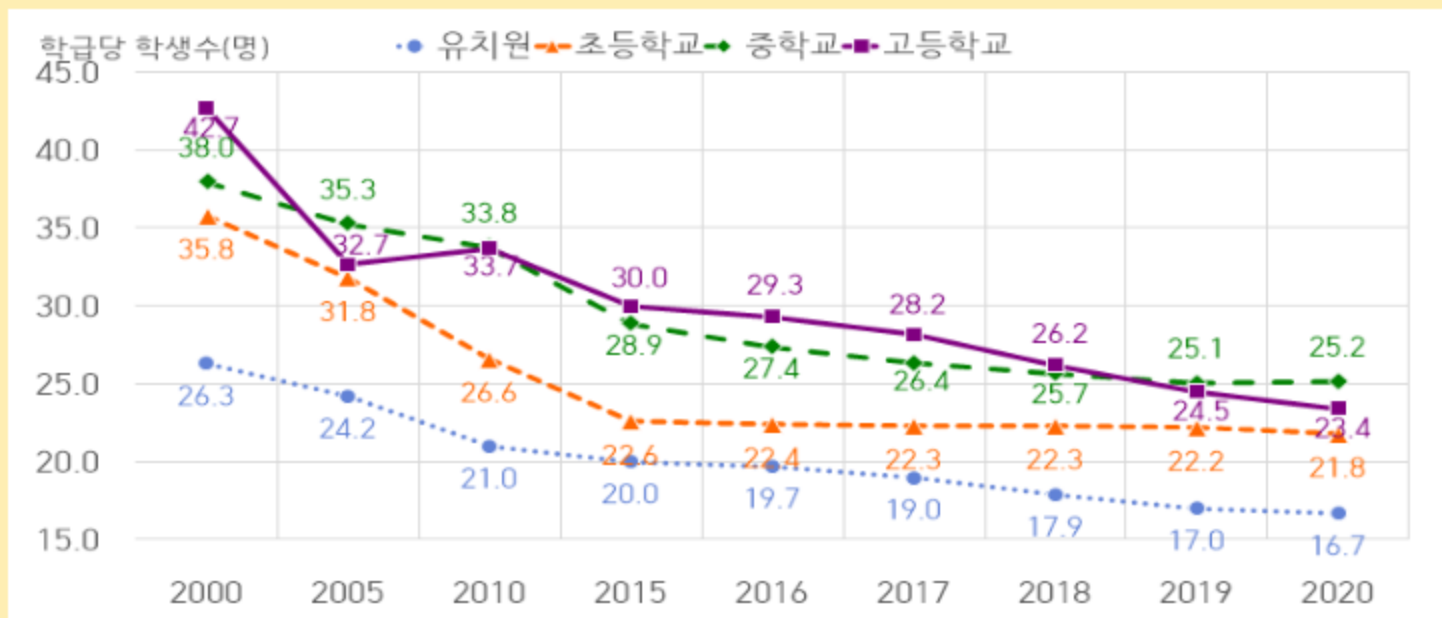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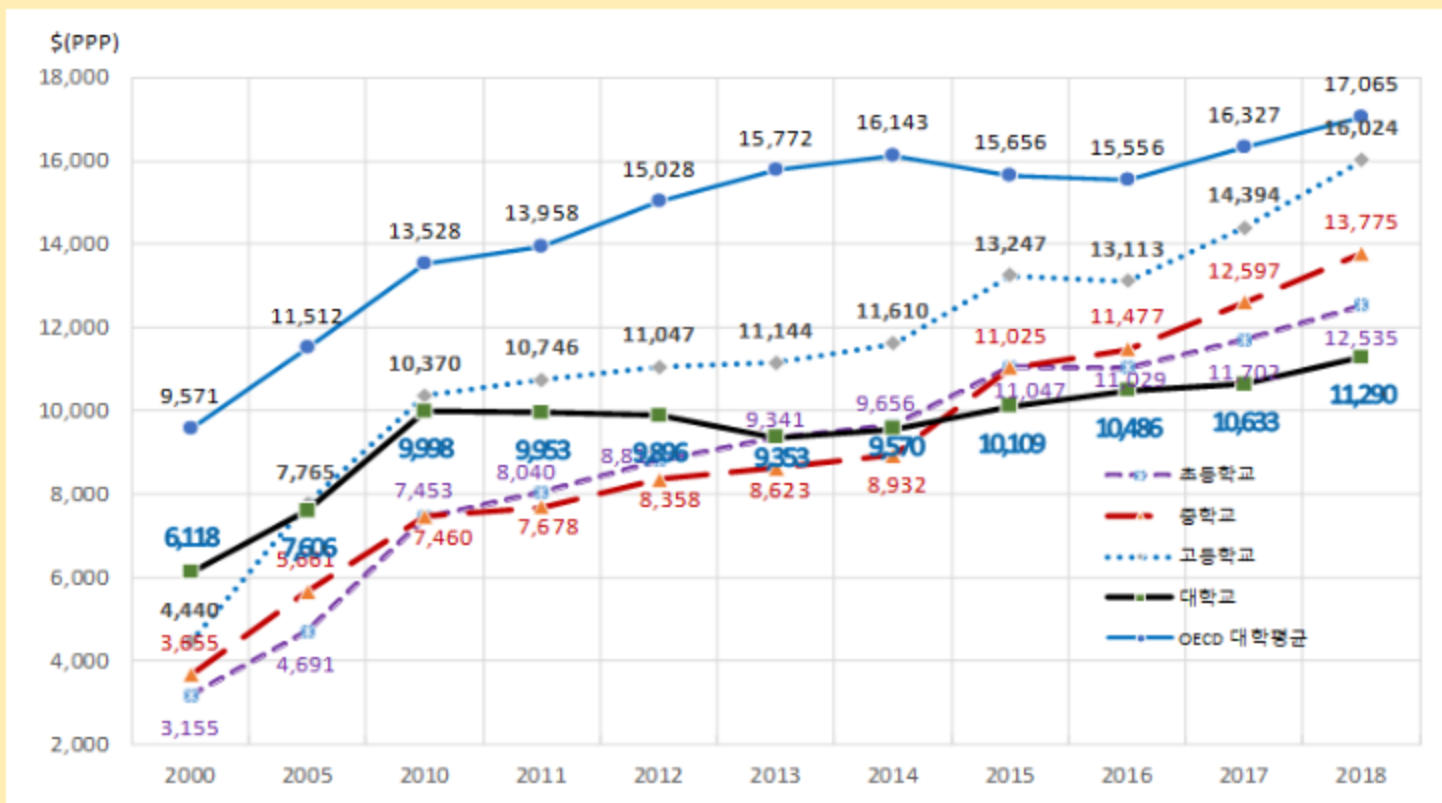


그림 3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자료 : OECD(각연도). Education at a Glance

한편, 고정된 내국세 교부율이 재정수입을 늘리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수입을 줄이거나 수요에 못 미치게 하는 효과도 있다(송기창, 2020). 실제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수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채 발행과 BTL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은 해는 2019과 2020년 두 해뿐이다. 학생 수 감소라는 요인 때문에 과도하게 교부금이 늘었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으나, 지방교육채 발행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교부금이 필요한 만큼 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방교육채 발행이 많았던 해에는 교육시설사업비가 줄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정 내국세 교부율은 양면성을 가진다. 법정교부율이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올 때는 재정수요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했지만(주로 국가가 만들어냈다), 재정수입 감소를 가져올 때는 재정수요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했다(주로 시·도교육청이 줄였다).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으로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 수와 내국세 규모가 계속 증가할 때 유리한 재원 확보방식이었으나, 내국세 규모는 줄지 않으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재정 과다 교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국세 법정 교부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새로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내국세 교부율을 실질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순기능이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교직원인건비는 실소요액을 교부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여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교직원인건비 실소요액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은 봉급교부금제도 부활을 넘어서 본봉과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을 포괄하는 보수교부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인건비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잠식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송기창, 2017).

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면 교부금부담의 지방채 발행은 차단되어야 한다. 교부금 재원규모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는 증액 교부나 국고보조금을 통해 해결해야 하나, 1996년부터 교육재정 GNP 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부금 부족액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나중에 교부금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일종의 교부금 당겨쓰기 방식의 관행이 생겼다. 지방채 발행 조건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부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비해 교부금 재원규모가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 상환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기준재정수요에 재정결함보전수요를 추가한 것(2005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나, 그 전에도 지방채 상환 수요를 교부금으로 지원해줌)은 상위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부금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직하다.

보통교부금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것이다. 특별교부금의 국가시책사업 수요도 교부금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모순이다. 국가시책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2004년 말까지만 해도 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국가시책사업이 추가될 경우 국가가 교부금을 증액하여 교부하였다. 특별교부금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교부금의 본질에 어긋난다.

교부금 교부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재정수요 12개 측정항목(26개 소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수요산정 간소화 및 산정된 기준재정수요의 예산한도액 설정 기능을 폐지해야 하며, 시설비와 선거경비 외에는 정산 규정을 폐지하여 교육감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준재정수요 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시·도의 자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지원사업비(기준재정 수요액의 일정률) 규모를 별도 교부하거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교부금의 2%로 하향 조정하여 당분간 국가시책사업수요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내국세 교부금 3%×국가시책사업수요 60%=내국세 교부금의 1.8%). 재해대책수요는 교특 예비비에 편성하고, 예비비를 초과하는 재해수요는 국가 예비비 지원으로 충당하면 된다. 지역현안수요(2020년 지역현안수요사업 709건 4,734억원)는 시·도 사업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시·도 사업으로 이양, 특고 인하 재원에 의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한다. 종국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가 시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주던 시절에는 기준재정수요로 포착할 수 없는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이 필요했으나,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는 특별교부금이 필요하지 않다. 국가예산에는 예비비 외에 재해대책을 위한 특별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참고문헌

- 송기창(2015). 학교재정에 대한 5.31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년 순계학술대회(2015. 5. 9.) 발표 논문.
 송기창(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회고와 과제. 교육정책연구, 1(2), 1-36.
 송기창(2020). 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99-128.
 송기창(2021a). 법과 제도 측면에서 본 제3기 지방교육자치제의 회고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등 4개학회공동 학술대회발표논문(2021.5.29, 동국대).
 송기창(2021b). 교육자치 30년의 회고-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의 과제. 경기교육연구원 심포지움 주제발표(2021. 7. 29.).
 송기창, 윤홍주(2011). 2000~2010년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 분석(2010년 통계 및 한국교육개발원(2010~2021).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 OECD(각연도). Education at a Glance.

합리성(合理性, Rationality)

“조직의 의사결정 원리로서 합리성”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권력은 합리성과 합리화 간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리성은 결정을 하는 데 증거와 이성에 적용한다.
합리화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결정을 합리적이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다."
(Hoy & Miskel, 2012)

■ 광의의 ‘합리성’ 의미와 사회과학에서 관심의 초점

넓은 의미에서 합리성은 논리(論理, logic) 또는 이성(理性, reason)에의 적합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정당한 근거 혹은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즉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객관화할 수 있는 증거 혹은 이유를 수반하는 주장·판단·신념을 지칭한다. 이러한 의미의 합리성은 근거 혹은 이유의 이해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혹은 준거가 일정하지 않은 일종의 개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94: 782-783).

한편 사회과학에서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종수, 2009: 540). 예컨대 “조직행동은 비합리적이고 권력은 종종 합리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Hoy & Miskel, 2012)와 같은 말 속에 담긴 합리성의 의미가 바로 대표적이다. 특히 조직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의 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는 개념이 바로 합리성이다.

■ 실체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사이먼(Herbert A. Simon)은 합리성의 개념을 실체적(또는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실체적 합리성은 주어진 조건이나 제약조건에 의해 부과된 한계 안에서 주어진 목표의 성취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하는 경우로서 ‘선택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절차적 합리성은 선택에 도달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과정)를 따르는 경우로서 ‘선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사이먼은 인간의 문제해결능력보다 문제의 범위 내지 규모가 큰 경우 실체적 합리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절차적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임의영, 2014: 13-14).

또한 만하임(K. Manheim)은 합리성을 기능적 합리성(functional rationality)과 실체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능적 합리성이란 조직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태의 속성을 말하는 반면, 실체적 합리성이란 개개인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행태의 속성을 의미한다(이종수, 2009: 540).



목차

1. 생애

2. 제한적 합리성

- 의사결정
- 개관적/제한적 합리성
- 합리성 제한요인
- 제안
- 의의

3. 조직이론

- 조직 생리학
- 조직 해부학
- 의의

4. 인공지능

- 연구 계기
- 물리적 기호 시스템 가설
- 의의

[그림 1] Simon, H. A. Bounded Rationality

■ 완벽한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선택 혹은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실존조건에 있다. 어떤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과정으로서 도구적 이성인 목적지향적인 합리성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이란, 일관된 선호체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알고 있으며, 각각의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알고, 자신의 선호체계에 따라 모든 결과들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벽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이성 외부의 요인으로서 '감정'과 이성 내부의 요인으로서 계산능력이나 정보처리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지'가 있다. 즉, "합리성의 적은 감정이 아니라 무지이다"(Crowther-Heyck, 2005: 59를 인용한 임의영, 2014: 11에서 재인용).

결국 인간의 의사결정원리로서 이와 같은 완벽한 합리성모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인간의 정보접근능력과 계산능력은 경험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 혹은 완벽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임의영, 2014: 8-9).

■ 경제적 합리성과 실체적 합리성의 제약요인

경제적 합리성이란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용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합리성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관심, 즉 절차적 합리성보다는 행위자의 행태, 즉 실체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합리성과 차이를 보인다.

기대효용의 극대화하는 인간 행태에 초점을 둔 경제적 합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uncertainty)’에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 실체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둔 이론들이 확률론, 게임이론, 합리적 기대이론 등이다. 예컨대 확률론은 불확실성을 확률개념으로 이해하고, 불확실성 하에서도 기대효용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임의영, 2014: 17).

■ 제한된 합리성의 기본 요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현실의 합리성은 제한된 합리성일 수밖에 없다. 제한된 합리성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불완전한 인간과 환경의 구조를 기본 요소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탐색이 주요한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궁극적으로 환경에 적응적인 특성을 갖는다.

<표 1>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기본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인간의 특성 (합리지향성)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합리지향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지만, 인간의 인지구조와 당면한 환경의 복잡성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데 종종 실패한다.
환경의 구조 (복잡성)	합리적 행동은 인지구조와 환경의 복잡성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이나 계산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은 복잡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탐색과정 (절차적 합리성)	불확실성, 대안형성의 곤란성, 계산능력의 한계 등과 같은 합리성의 제약요인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탐색 과정을 이론적인 논의에 포함시키고, 대안선택의 기준을 최적수준에서 만족수준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적응 (adaptation)	개방체계(인간이든 조직이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계의 유지와 작동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흡수하고, 내부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산출물을 환경에 내보낸다. 환경 역시 체계의 산출물에 반응하여 일정한 신호를 체계에 다시 보내게 된다. 이러한 투입, 산출, 피드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체계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주 : (임의영, 2014: 11-16) 재구성.

■ 정책형성의 규범적 모형으로서 합리성 모형

합리성 모형 혹은 합리적-종합적 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과 지식 및 정보의 가용성을 전제로 한 이론 모형이다. 즉, 정책 결정시 정책결정자가 제기된 문제의 성격과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모형이다. 정책결정자의 전지전능함, 최적 대안의 합리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낙관적 모형이라고도 한다(김종철, 1989: 227).

그러나 전지전능함에 대한 전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이성과 능력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합리성 또한 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각종 통계적·계량적 기법을 동원하고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정보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 활동의 비계량적 측면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한계가 많다. 합리성 모형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개발된 정책형성 모형이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등이다(윤정일 외, 2021).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94). 「교육학용어사전(전정판)」. 서울: 하우. 윤정일, 송기창, 김병주, 남수경(2021). 「교육행정학원론(제7판)」. 서울: 학지사.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개정판)」. 고양: 대영문화사.
- 임의영(2014). H. A.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행정학. 「행정논총」, 52(2), 1~35
- Hoy, W. K., & Miskel, C. G.(2012).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9th ed.).
- 오영재, 신현석, 양성관, 박종필, 가신현 역(2013). 교육행정: 이론, 연구, 실제. 아카데미프레스.

평화교육의 세기둥

상상하기, 공감하기, 용기내기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특히 접경지역인 우리 강원도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화두가 아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평화는 과연 교육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평화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 평화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다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그것은 상상, 공감, 용기이다. 이 덕목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

평화는 상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팝송 이매진은 대표적인 반전평화 노래로 잘 알려져 있다.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살인과 죽음, 종교가 없이, 그리고 불평등도 없이 전쟁을 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핵무기를 마치 장난감 다루 듯해 핵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에도 학생들은 평화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다.

평화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게르니카 마을의 아픔을 그려 유명하지만,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한국에서 전쟁 중 벌어진 양민학살을 그림으로 그려 전쟁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다.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삶과 행복, 아픔 등을 공감할 수 없다면, 다른 문화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로인해 평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평화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버스 안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던 차별적 제도에 대해 용기있게 거부한 미국의 로자 파크는 이후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녀의 용기가 수많은 흑인들이 그날 이후 385일 동안 자리양보 거부운동에 동참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차별적 제도를 폐지시켰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지역과 학벌에 따른 차별 등 어떠한 차별에도 과감히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구조적 폭력이 사라지고 일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왕따문화에 대한 저항, 미투운동, 갑질에 대한 저항 등도 일상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용기있는 행동들이다.



[그림 1] 강원도 교육청 주관 “통일왓수다” 강의 장면

상상, 공감, 용기를 어떻게 평화교육에 도입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평화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일천한 것을 인정한다면,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의 평화교육을 위해서 모든 실험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이 함께 있는 토론회에서 평화를 강의 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필자의 경험으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화의 가치에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평화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모두가 잘 아는 주제인 것 같지만 또 모두가 잘 모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학생친화적이어야 한다.

강력한 무기가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던 알프레드 노벨과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도 결국 무기가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노벨은 자신이 번 돈으로 노벨상을 만들면서 평화운동과 관련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이들을 선발하여 평화상을 수여케 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과학자로서의 업적이 결국 인류를 파멸케 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였다. 그가 버트란트 러셀과 반핵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함으로써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연설에서 전 세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군산복합체라고 할 정도로 소수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따라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 외에도 군부독재, 통제되지 않은 국가폭력 등도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다. 일상의 차별과 불평등도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실수를 늘 경계함으로써 평화를 위협받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민주항쟁과 4·3사건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과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출발에 해당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돌 행사에 참가하여 “독일은 세계가 더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자국이 항복문서에 사인했던 콩피에뉴 숲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래지향적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영상메시지에서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고 선언하였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년 기념일에 앞서서는 “나치의 만행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하였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도 1970년 12월 폴란드의 게토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에 의해 학살된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고 잘못에 대한 반성을 멈출 수 없었다. 독일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멈추지 않는다. 쉽지는 않으나 역사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비평화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는 독일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만을 전부로 삼을 수도 없다. 비무장지대가 이름과는 달리 무장도와 긴장도가 왜 그리 높은가? 분단에 의한 남북한의 경쟁은 비무장지대의 왜곡을 심화시켰다. 수많은 전방초소와 지뢰들은 남북한의 단절의 상징들이었다. 이제 남북이 시범적으로 전방초소를 폐쇄하고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단절로부터의 복원을 위한 시작이고, 평화의 시작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군사적 충돌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군축을 진행하는 것은 평화교육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디터 쟁하스의 이 경구는 평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 속에서 평화는 사람들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 등에 의해 위협을 받아왔다. 국제관계나 남북관계나 개인의 일상에서나 나와 관계하는 대상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한다. 서로 만남을 지속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따라서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과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아닌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는 일상의 문화 속에서 배양되어야 한다. 평화문화는 일상의 권위주의적이고 갈등적인 문화적 요소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에서 형성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 과거와 현재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는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평화문화는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것이다. 결국 평화를 준비하는 평화교육은 학생들에게 상상하기, 공감하기, 용기내기의 능력을 함양시켜 평화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영상 자료



클립영상



도서 자료





통일교육과 강원도



이서현(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강원도는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 무려 5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나 된다. 5개군의 접경지역의 총면적은 남한 접경지역의 총면적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강원도 전체 면적의 28.5%가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강원도는 경기도, 황해도와 더불어 북한과 나누어져 있는 도(道)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통일된 뒤 강원도는 통일 관련 국가사업을 주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떨까? 통일이 된다면 강원도는 주도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받고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고등학교 사회교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북한과의 지리적 위치, 문화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역할이 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실상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유명무실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로 학교선생님 중 윤리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을 주도로 통일골든벨, 통일글짓기 등 대다수 형식적인 시간으로 보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수업시간 도중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다’라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북한에 대해서 어느 사전지식도 없는 경우도 많아 보였다. 통일에 대한 인식 부족을 마냥 학생들의 무관심만으로 돌리기에는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들(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 조사(2019)에 따르면 북한과 통일정보는 41% 정도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얻었으며 학교수업은 28.6%에 그쳤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수도 관심 없기는 교사 또한 마찬가지며 그저 귀찮은 존재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한다면 학교현장에서 교육으로 책임져야 하는 교사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전에 통일교육 연수를 몇 번 숙박형태로 참여했던 적이 있다. 강원도의 DMZ부터 통일전망대, 한국전쟁과 관련된 지형·유물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자료는 생각보다 넘쳐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들을 가르칠 시간도 역량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슈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지역은 안타깝게도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 파주가 우선적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접경지역 근처의 학생이 아니라면 철원, 화천 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통일 이후 우리가 지금과 같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지 모른다.

물론 평화적인 통일 역할에 앞서 강원도와 다른 시·도를 나누어 지역이기주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 분명히 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배제당하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앞으로의 입지에서도 뒤쳐질 것이다. 강원도는 유일하게 광역시급의 도시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며 심지어 인구가 40만을 넘는 도시도 없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이 없는 지역으로 지목되곤 한다. 통일 이후 강원도의 발전과 존속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초·중등 학생들이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강원대도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지위에서 강원도의 지형과 통일에 관련된 문화·유산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전문가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함으로써 강원도가 통일에 관련된 국가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

전국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01

윤요왕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센터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02

윤희순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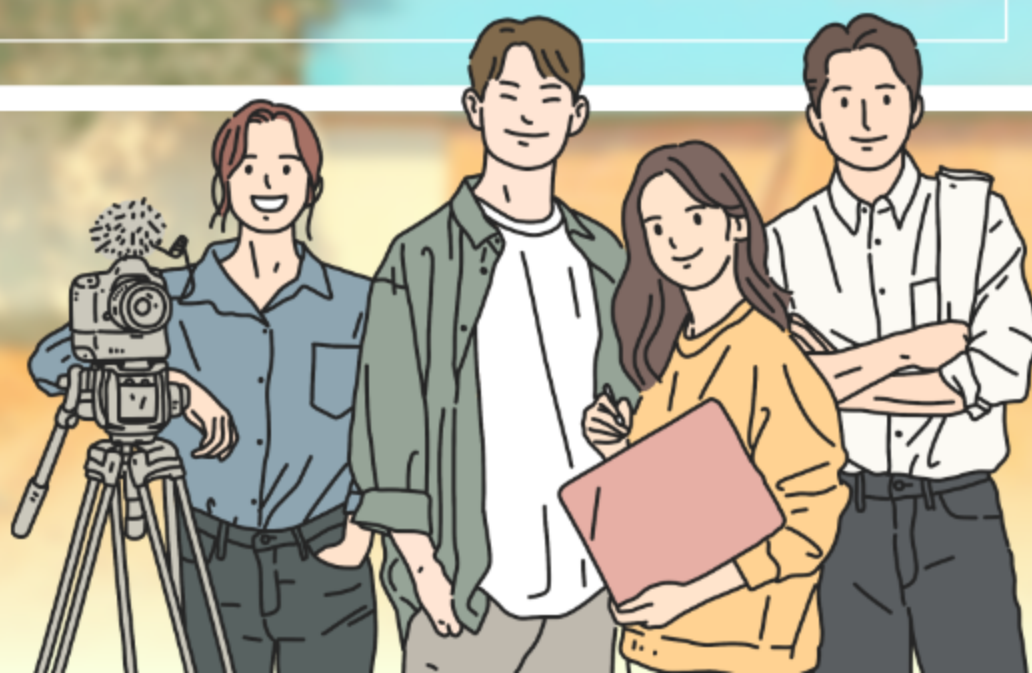


03

최근순

비단병풍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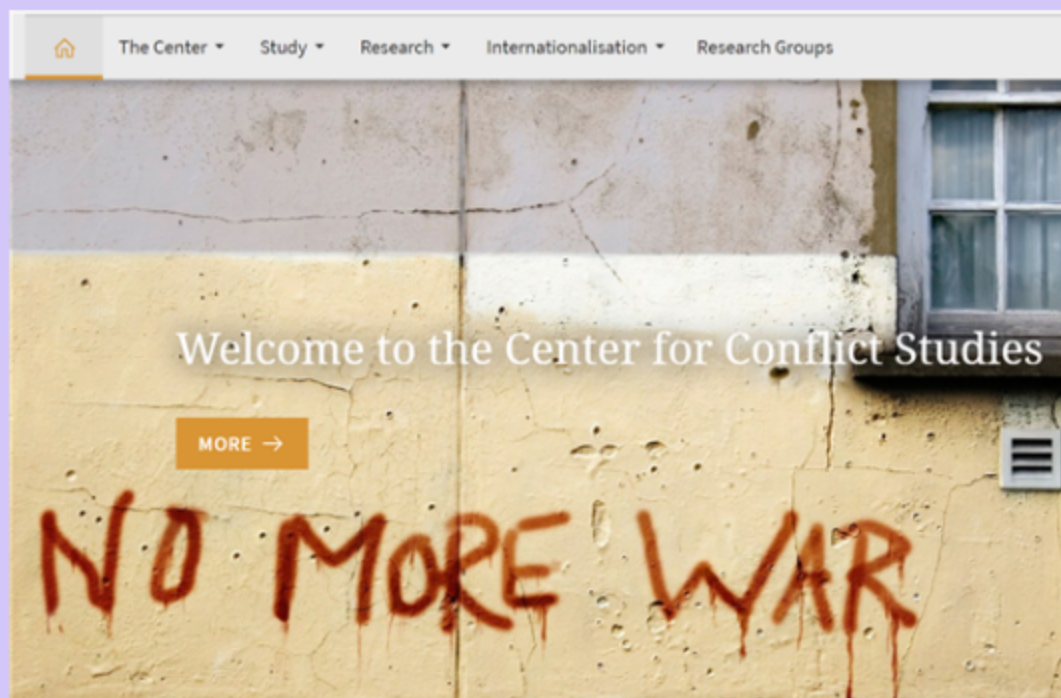
[독일]

평화로운 공존, 다문화 소통을 위한 평화교육

김지원(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교수)

평화관련 학과 운영 및 연구소 설립

- 우리와 비슷한 분단상황을 겪은 독일의 대학은 평화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 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림 1] 마르크부르크 대학 갈등연구소 홈페이지

- Marburg 대학은 평화와 갈등 연구에 특화된 최초의 대학으로서 Center for Conflict Research에서는 외무부는 물론 시민평화재단(ZFD)과 같은 NGO단체와 협력하여 학제간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이 학위과정은 영국의 British University of Kent / Canterbury와 공동학위과정으로 운영됨.
- 이외에도 함부르크 대학의 IFSH(Hamburg Institute for Peace Research and Security Policy), University of Bochum, Catholic University of Eichstätt-Ingolstadt 대학에서도 평화 및 안보,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학생평화상’ 시상

- 니더작센주 교육부는 매년 평화로운 공존과 다문화간 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경연대회를 통해 ‘학생평화상(슐러프리덴스프리스: Schülerfriedenspreis)’을 시상하고 있음.
- 학생평화상은
 - 다양한 출신, 언어,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국제 이해 및 문화 간 대화 지향
 - 모든 형태의 그룹과 관련된 적대심을 다루며 폭력 예방,
 - 선입견을 타파하고 도덕적 용기를 내며, 봉사활동을 장려함.



[그림 2] 학생평화상 로고




[그림 3] 학생평화상의 모든 수상자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10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Education for KNU 특강 개최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12시 00분-13시 30분

장소 비대면(Zoom 기반 화상회의) 

주제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연사 이정연(동경대학교 교수)

내용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연(동경대)

합계출산율의 감소



『2020年版厚生労働白書』: <https://www.mhlw.go.jp/stf/wp/hakusyo/kousei/19/backdata/01-01-01-07.html>

지역 교육 협력과 2022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1.학과소개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 학과 비전과 목표

비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재생

단계별 목표

초대기

발전기

확산기

▶ 지역교육협력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시스템 개발/정립

▶ 교육과정 고도화와
연구 정체성 확립

▶ 글로벌 교육 및 연구
모형 확산

영역별 목표



교육

연구-교육-실천 초연결
(Hyper-REA)
교육과정 혁신



연구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체제
모형과 발전방안 제시



국제화

지역 맥락을 담은
지역교육협력 글로벌 모형
도출과 확산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다학문적인 탐구와 실천형 연구 참여

‘교육-현장 연계’ 심화 교육과정’ 운영



학생선발	지도교수	과정 이수	집중학기제	비교과활동	현장실습
석사, 석박사 연계, 박사 과정 개설 강원도교육청 파견 교원 및 직원(석사과정) 교육관련 전공자, 지역교육협력 문제 의식 공유	연구주제에 따른 전공지도교수 배정 모든 연구과정은 공동지도교수체제 로 운영	연구설계 및 연구법 강의 의무 수강 관심 주제별 프로젝트 기반 수업 참여 과정 중 논문발표 및 학회 참가 지원	<u>〈파견 교원 및 직원〉</u> 파견교육 1년간 관심 주제 기반 논문집중 연구 지도	한국교육학회 강원지 회 분기별 발표 참여 1인 1 교육연구소 프 로젝트 참여 월례세미나 운영 사범대학 사업 자문	하계/동계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현장 교육 지자체/교육지원청 컨설팅 활동 2차년도 교육현장 복귀 후 실행연구 수행

2. 강원도교육청 특별연수생 선발전형



학과(전공)
교육혁신전공
지역사회협력전공



특별연수기간
2년
1년차 전일제 집중교육
2년차 Internship교육



파견기간
1년
(2021.3.1.~2022.2.28)

강원도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혁신의 성공적 정착, 교육격차 해소, 교직원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 현안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가 협력합니다!

지원대상

교원 10명, 교육전문직원 3명, 일반직공무원(6급) 5명

서류 제출처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교육국 교원정책과
- 일반직공무원 : 행정국 총무과



지역교육협력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3.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인터넷 원서접수	2021. 11. 10(수), 09:00 ~ 11. 17.(수), 18:00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전공 구술	2021. 12. 7.(화)
합격자발표	2021. 12. 23.(목) 14:00 이전

4. 지원자격

석사

- 학사 학위 소지자(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박사

- 석사 학위 소지자(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석사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경우** 지원 학과 주임교수(학과장)의 동의를 받은 자

석·박사 통합

- 학사 학위 소지자(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사 성적 백분율이 80점 이상인 자**

※ 편입학생은 최종 편입학한 대학의 성적 백분율이 80점 이상인 자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참고



지역교육협력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